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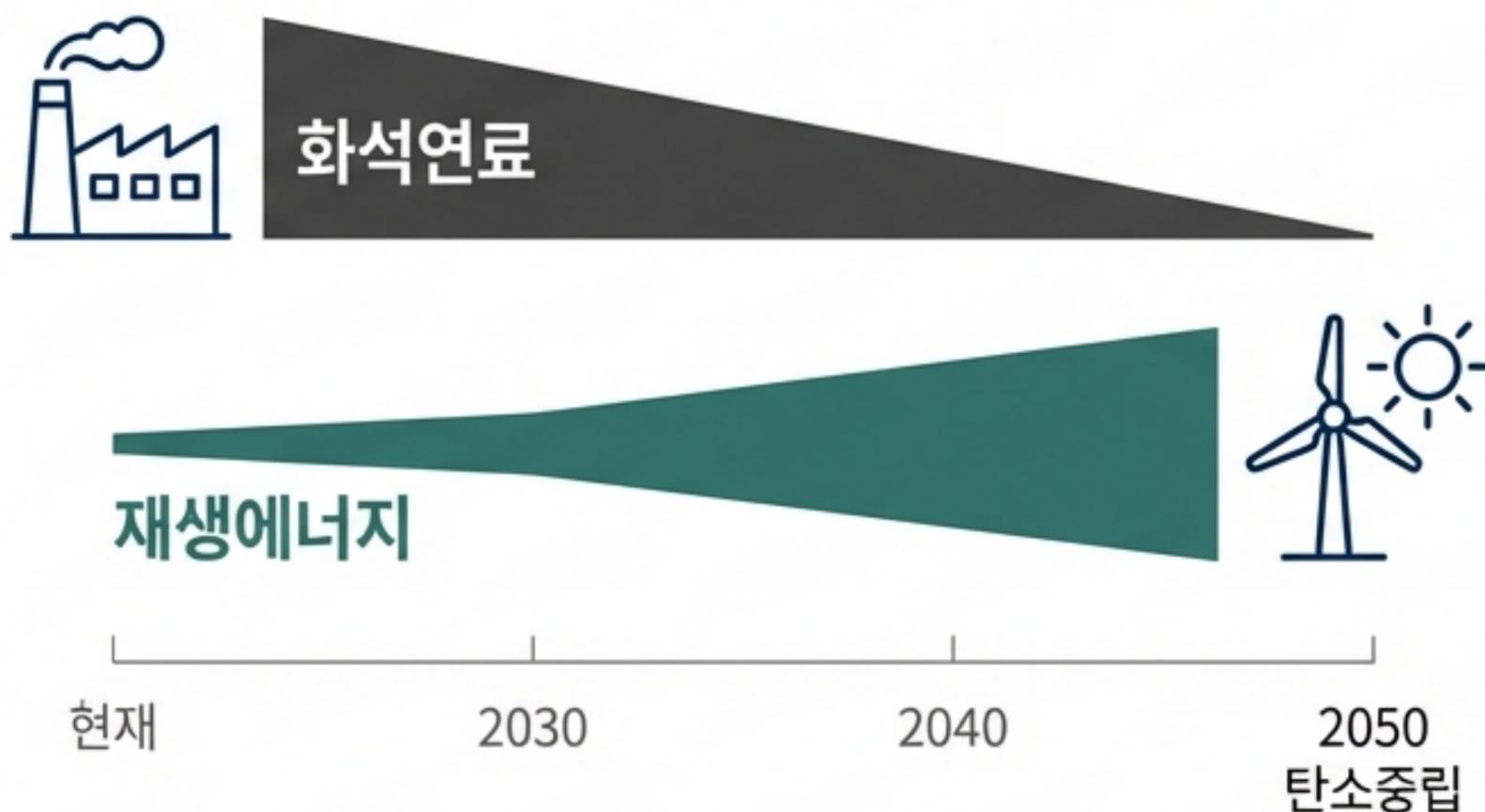
#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

##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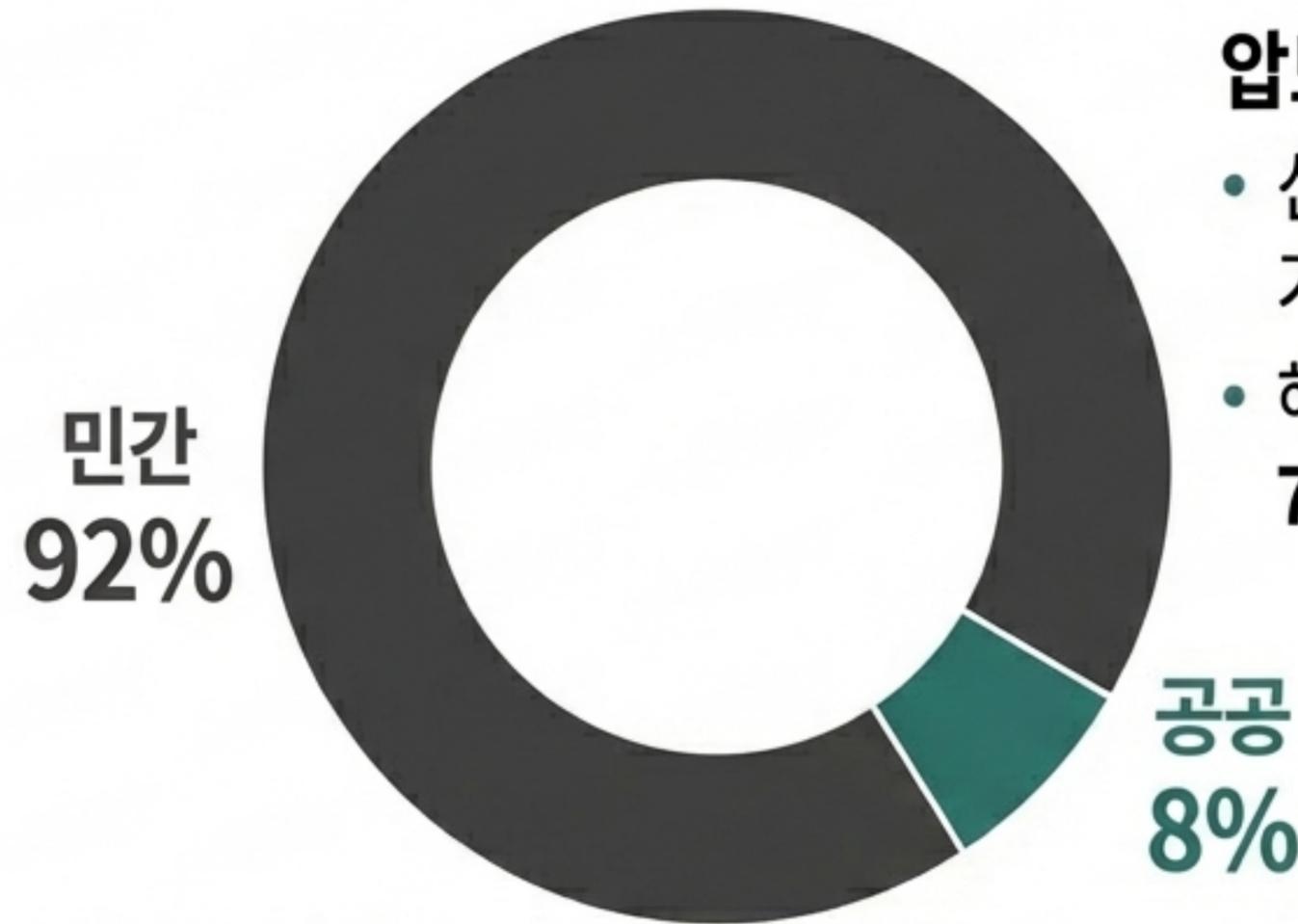
# 국가적 과제: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속화

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감축 및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.

- **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:**  
화석연료 발전 비중의 단계적 감축.
- **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불가피성:**  
기후위기 대응 및 미래 에너지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.
- **향후 전력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예상:**  
재생에너지가 전력 공급의 중심으로 부상.



# 현행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한계: 민간 편중과 공공성 위기



## 압도적인 민간 주도 시장 구조

-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의 **92%**가 민간 소유 (2023.12 기준).
-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77건 중 **70건**이 민간 사업자.

## 주요 리스크 발생

- **공공성 훼손:** 민간 기업, 특히 해외 자본의 시장 지배력 강화 우려.
- **에너지 안보 기능 약화:** 국가 기간산업인 전력의 통제 및 관리 능력 저하 가능성.
- **공공영역의 전환 대비 미흡:** 화력발전을 담당해온 공공부문의 역할 축소 및 미래 에너지 시장에서의 소외.

# 산업 전환의 그림자: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 위기

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는 관련 산업 노동자들의 대규모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현안입니다.

- **석탄화력발전소의 점진적 퇴출**  
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른 필연적 수순.
- **고용 불안 심화**  
발전소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단절 및 일자리 상실 문제 대두.
- **정의로운 전환(Just Transition) 요구 증대**  
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,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.



# 입법적 대안: 「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」 제안

본 법률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, 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,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**정의롭고 균형있는 개발**  
재생에너지의 공정한 이용  
및 이익 공유.



공공재생에너지  
확대 법률안



**기후위기 대응 및  
국민 건강 보호**

공적 투자를 통한 재생에너지  
개발, 소유, 운영.



**노동권 보호 및 정의로운 전환**

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권익 보호.

# 전략 1: 공공재생에너지의 법적 기반 및 국가 목표 설정

명확한 법적 정의를 수립하고, 구속력 있는 국가 목표를 제시하여 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의 기틀을 마련합니다.

## 법적 정의

### 공공재생에너지의 정의 (안 제2조)

공적 주체(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가 소유·운영하거나 50% 초과 출자한 법인이 생산하는 재생에너지.



## 국가 목표

구속력 있는 설비용량 목표 설정 (안 제6조)

# 2035년 공공 50%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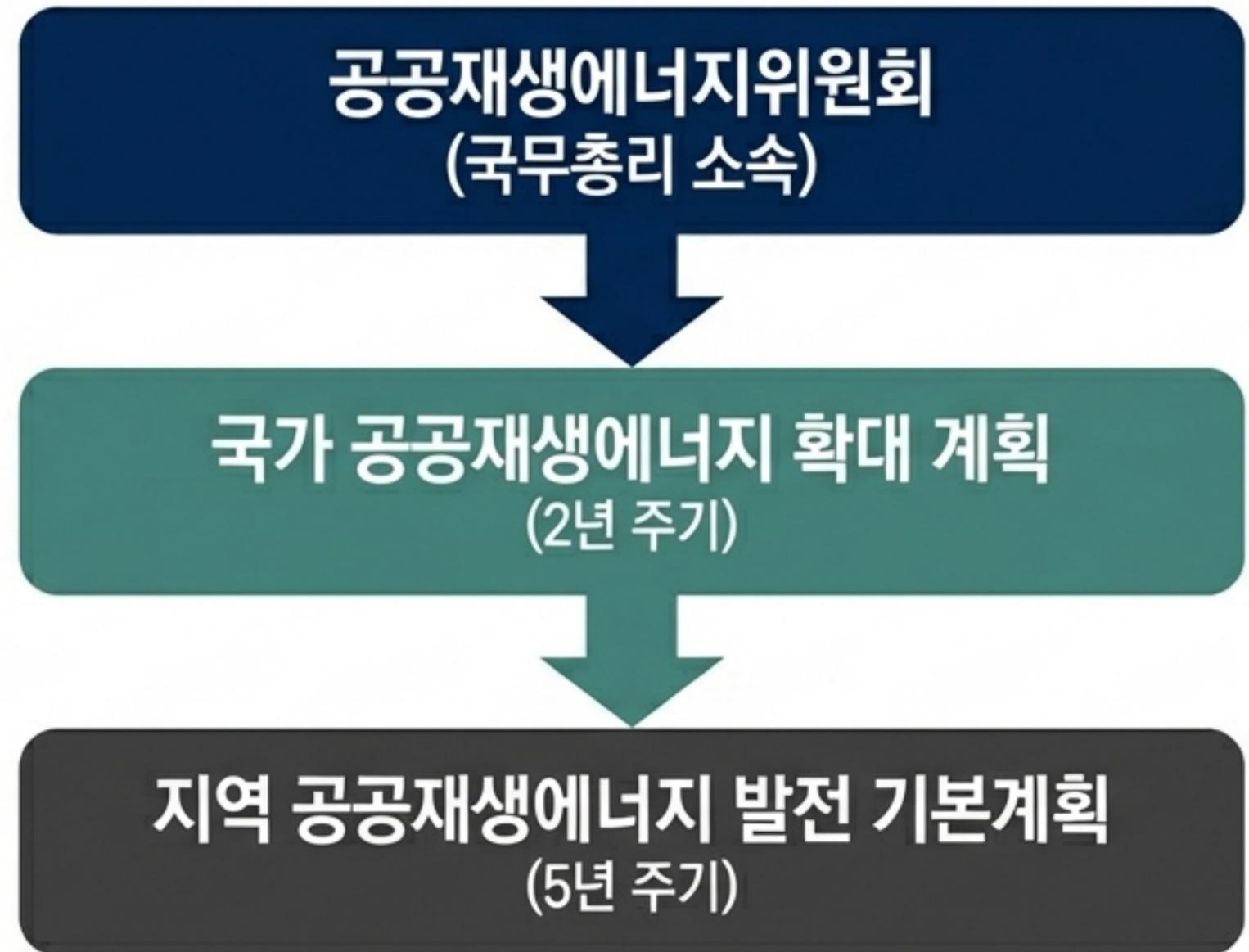
총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

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,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 
주요 국가 계획에 목표 포함 의무화.

## 전략 2: 체계적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및 실행 계획 구축

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실행 계획과 총괄 심의 기구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합니다.

- 국가 및 지역 단위 계획 수립 (안 제7조)
  - 국가 계획: '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년마다 '국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계획' 수립.
  - 지역 계획: 지자체장이 5년마다 '지역 공공재생에너지 발전 기본계획' 수립.
- 정책 총괄 심의기구 설치 (안 제8조)
  - 명칭: 국무총리 소속 '공공재생에너지위원회.'
  - 주요 기능: 국가 목표 설정,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, 발전지구 지정 등 심의·의결.
  - 구성: 국무총리 공동위원장, 정부·공공기관·노동계·시민사회 대표 등 참여.



# 실행 수단: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지원

‘발전지구’를 지정하여 공공 주도 사업을 활성화하고, 계획 단계부터 환경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합니다.

- 발전지구 지정 목적:
  - 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사업 활성화.
  - 환경 훼손 및 사회적 갈등의 예방 및 최소화.
- 주요 절차 및 지원:
  - 예비지구 지정: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적합성 검토.
  -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: 계획안 공고, 열람 및 현장 실사 등 투명한 절차 보장.
  - 행정적·재정적 지원: 지정된 지구 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지원.



# 전략 3: 노동과 지역을 포용하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전환

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,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합니다.

## 노동자 고용 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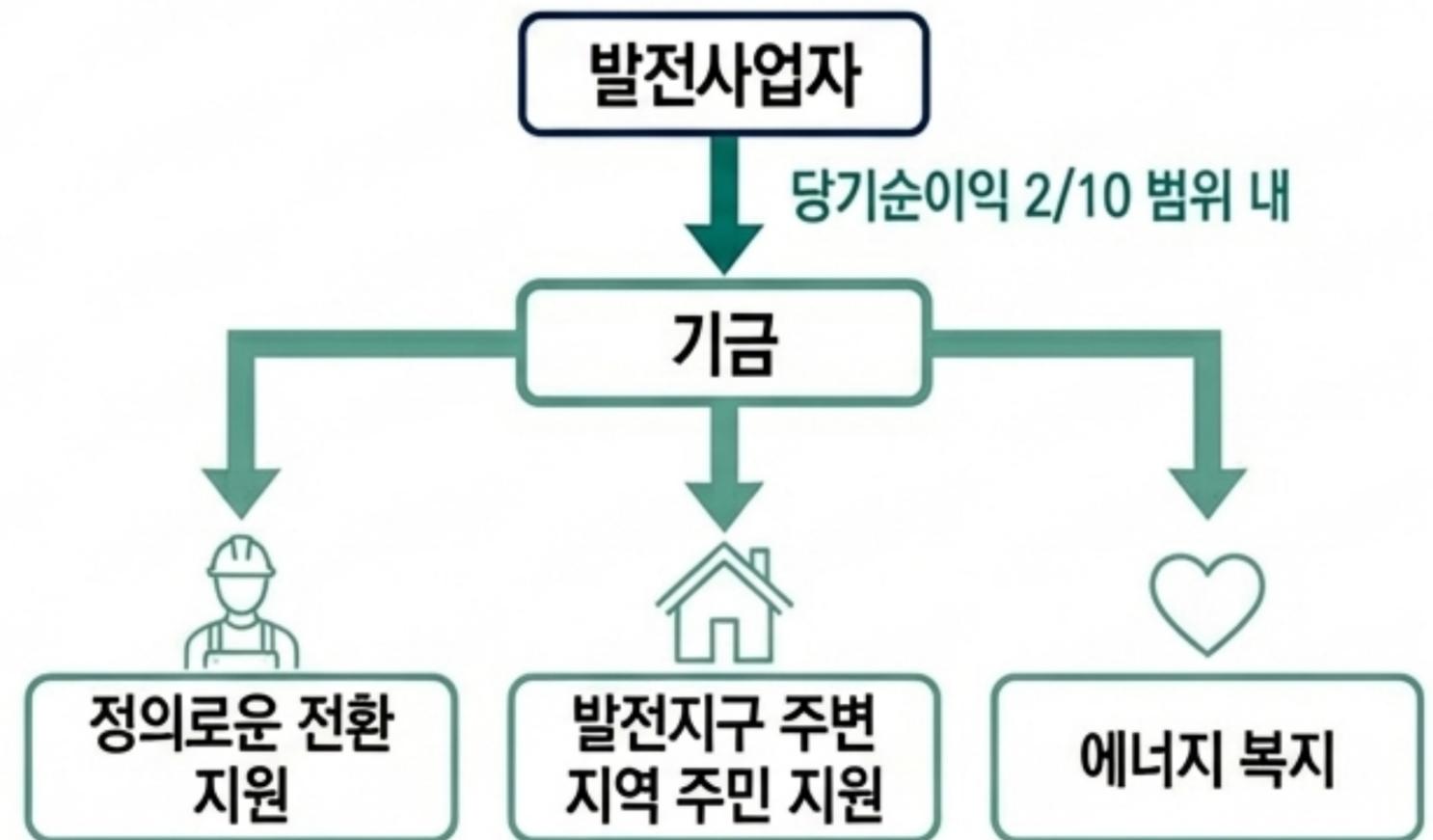
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 우선 고용 의무 (안 제14조)



- 대상: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(국가, 공공기관 등).
- 내용: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노동자 우선 고용.
- 원칙: 종전보다 낮은 근로조건 금지.

## 지역사회 이익 공유

재생에너지 자원 이용 부담금 신설 (안 제13조)



# 세부 방안 1: '정의로운 전환'의 법제화 및 이행 의무

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강화합니다.

## 법률안 제14조 (화석연료 발전산업 종사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)

**의무 주체:**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이들이 50% 초과 출자한 법인. (KoPub Dotum Light #333333)

**의무 내용:**

- ✓ 1. 우선 고용: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수행 시, 화력발전소 폐쇄 등으로 인한 실직 노동자 우선 고용.
- ✓ 2. 근로조건 보장: 이전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 적용 금지. (KoPub Dotum Light #333333)

**정부의 관리 및 지원 의무:**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, 생계 안정, 전직 및 재취업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여 실업 발생을 방지해야 함. (KoPub Dotum Light #333333)

# 세부 방안 2: 자원 마련 및 이익 공유를 위한 '자원 이용 부담금'

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, 이를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상생의  
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.

**부과 대상** : 모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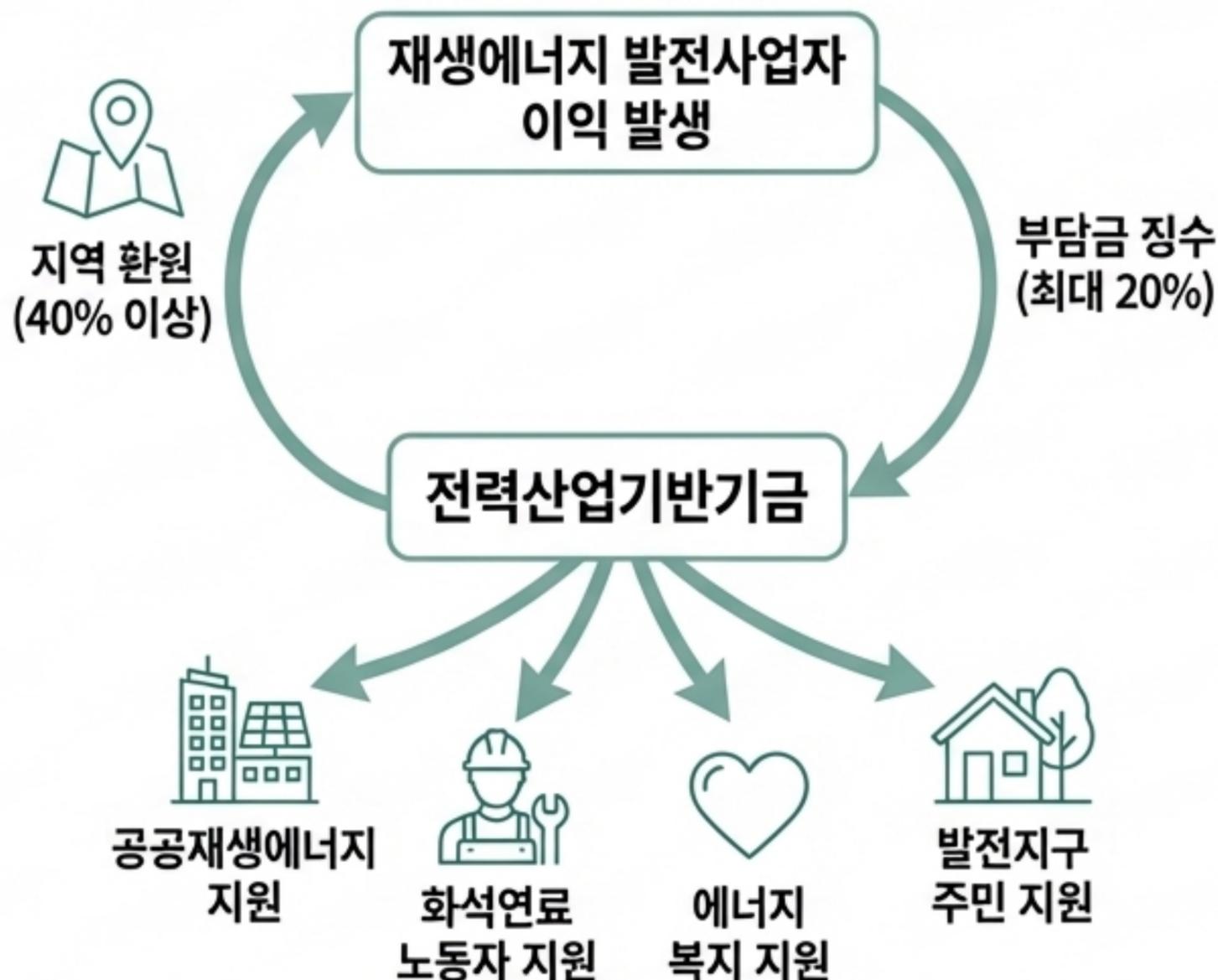
**부과 기준** : 당기순이익의 10분의 2 범위 내.

**징수 주체** :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**주요 사용처 (전력산업기반기금 세입)**

-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지원.
- 화석연료 발전산업 노동자 정의로운 전환 지원
- 에너지 복지 지원.
- 발전지구 주변 지역주민 지원

**지역 환원** : 징수된 부담금의 10분의 4 이상을  
해당 발전시설 소재 지자체에 지급



# 법률안 통과 시 기대효과 및 미래 비전

## 공공성, 안보, 사회적 포용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생태계 구축



### 균형 잡힌 에너지 시장

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전력 시장 형성.



###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

에너지 주권 확보 및 국가 기간산업의 안정적 관리.



### 사회적 갈등 최소화

계획입지 도입과 이익공유를 통한 주민 수용성 제고.



### 정의로운 전환 실현

산업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성장 달성.